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5/ 25 통권 1572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변화를 꾀한다(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사전증여·상속재산의 합산과세·별도과세와 대응 공제금액 배분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 (Gross-up)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의무 안내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상가건물의 분양 인도시기지연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운반구 · 유형자산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개념, 구분	소득세법 조문, 해당사항 상세내용, 제외조건 등	비용
사업소득범위	19조 : 한국산업분류표상 열거 · 계시된 모든 계속 · 반복적 영리활동(농 · 어 · 광, 제조, 도 · 소매, 음식 · 숙박, 서비스 등)	실제비용
기타소득 제외	20조 : 사업소득에 속하지 않는 일시 · 우발적 열거소득, 산업재산권 양도 등	법정경비 60% 인정
차량운반구	19조 20호 :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등 매각대금도 사업수입에 포함	유지비,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양도소득 제외	19조20호 : 사업용자산이라 하여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 건물 양도소득은 제외 → 양도소득세로 별도과세함	양도가 - 취득가
총수입산입	24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재난영업손실 보상금도 포함), + 간주임대료	사업원가
총수입 불산입	26조 : 세금환급, 무상수증익과 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보전 총당금액	해당없음
복식부기 기준	160조 : 장부비치 · 기록의무나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신고의무 판단 기준 매출액(수입금액)에서 사업용유형자산(차량 · 운반구, 토지 · 건물 등 부동산 매각액) 수입금액은 제외함	해당없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교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72호 / 주간 21호

2022. 5. 25.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운반구·유형자산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사전증여·상속재산의 합산과세·별도과세와 대응 공제금액 배분	2
C E O 에 세 이	CEO는 변화를 꾀한다(2)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시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 의 - 건물임차료 내 주차료가 포함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신설 공사 시 타 업체와의 비용부담 관련 - 단가 협상중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 종교인의 소득구분에 따른 공제금액	10 11
직 장 인 Survival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10가지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5081, 2021.07. 21)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970, 2021.07.26)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중부세재산세 통합’ 지방 양극화 우려...세금 완화는 필요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상가건물의 분양 인도시기지연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공 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13
세 무 정 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부기장의무 안내	16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사전증여 · 상속재산의 합산과세 · 별도과세와 대응 공제금액 배분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개념, 관계		사전증여 : 수증자별로 계산		사후 상속(상속재산 전체합산)	
		본인(서로 합산)	배우자	본인(자녀)	배우자 (본인과 별산)
본인		해당안됨	10년 단위 6억 공제	해당안됨	일괄공제 5~30억원 한도 (상속비율배분 금액 공제 가능)
배우자		10년 단위 6억 공제	해당안됨	일괄공제 5~30억원 한도 (상속비율배분 금액 공제 가능)	해당안됨
자녀	1	10년 단위 5천만원	증여 겹치면 0	일괄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2	증여 겹치면 0	10년 단위 5천만원		
	3	공동증여시 2500만원(반)	공동증여시 2500만원(반)		
	4(미성년)	공동증여시 1000만원(반)	공동증여시 1000만원(반)		

부모(존속)		10년 단위 5천만원	겹치면 0원	×	×
손자	성인	10년 단위 5천만원	증여 겹치면 0원	상기의 일괄공제 5억원에 포함됨	상기의 일괄공제 5억원에 포함됨
	미성년	10년 단위 2천만원	증여 겹치면 0원		
유리 · 불리 판단		• 부부의 자녀 증여재산은 10년 내 모두 합산 계산(상증법 제47조제 2항)되며, 공제금액은 배분계산 됨(부부재산 분산되어도 증여세에 유리한 점은 없음), 따라서 10년 단위로 다른 기간에 증여함이 유리 • 조부모 · 외조부모는 합산 안함		부부가 각자 균등하게 상속재산이 분산소유 관리된 경우, 상속세가 가장 적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13일 (금)	5월 16일 (월)	5월 17일 (화)	5월 18일 (수)	5월 19일 (목)
미	달	러 (USD)	1286.40	1286.00	1281.60	1277.20	1269.30
일	본	엔 (JPY)	1000.58	993.86	993.30	986.67	988.98
캐	나	다 달 러 (CAD)	986.73	995.55	997.39	997.9	985.56
홍	콩	달 러 (HKD)	163.87	163.82	163.26	162.71	161.72
위	안	화 (CNH)	189.87	188.43	188.53	188.28	187.94
유	로	화 (EUR)	1335.35	1337.70	1337.48	1347.25	1329.21
호	주	달 러 (AUD)	883.31	892.29	893.92	897.68	884.32
싱	가	폴 달 러 (SGD)	921.00	922.82	920.99	922.53	912.44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92.81	292.41	291.41	290.93	288.77

CEO는 변화를 꾀한다(2)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세상이 변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CEO자신이 변해야한다. 그런 후 조직과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조직이나 기업문화가 경직되고 관료적이어서는 생존·발전·번영이 불가능하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기 위해 벼라별 노력을 다하게 마련이다. 미국에서 9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편 경영(Management by fun)’이 그 중 하나다. 직원들에게 유머 훈련을 받게 하여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사가 이를 통해 급성장을 이루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P&G의 CEO였던 앨 라즈와니 사장도 “직장은 반드시 재미있고 멋진(fun and cool)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T기업들을 시작으로 사내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예전의 경직된 사무실 모습을 탈피하는 추세다. 직원들 영어교육도 ‘골든벨 퀴즈대회’형식으로 진행하여 전원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아무개 과장 세 번 웃기기 등의 임무를 주고 그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하다하다 보니 별걸 다 보고서 쓰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실패를 격려해 주어야

그러나 정말 진짜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기업풍토는 편 경영같은 표피적 전략만으로는 안 된다. 포장된 편(fun)이나 ‘보고서’로는 어렵었다. 한때 신바람경영이니 W이론이니 하며 소리만 요란한 것도 엇나간 것이었다. 술 취한 듯 단기 프로젝트는 될지 모른다. 실로 경영이란 지속적 생명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와 보수 시스템, 투명한 민주경영 등 갖 추어야 할 경영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 그 중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패를 격려하기’ 기업 문화 창달이다.

21세기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다. 무릇 경영이란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구성원들은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일탈적인(deviant)’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급자들이 평일 골프나 사우나를 가면 ‘업무용’이고 ‘창조적 휴식’이지만 하급자들은 ‘농땡이’라고 매도되는 것이 한국기업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힘센 자들의 편견이나 횡포가 사라져야 한다. 그런 후 자율이 싹튼다. 흔히 아이디어 상품을 무수히 개발한 혁신적 기업으로 3M이 거론된다. 스카치테이프, 욕실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수천개 아이디어 상품으로 빛나는 기업이다. 그것은 신제품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에 가능했다. 쓸모 째짤한 포스트 잇도 실패에서 나왔다. 노벨의 다이나마이트도 실패과정에서 얻은 게 아닌가.

발명왕 에디슨은 2000번의 시행착오 후 전등을 발명했다.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2000계단일 뿐이다."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실패는 고효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실패의 자산화’는 실패 경험을 살려 ‘실패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패의 정보를 공유해야

따라서 실패를 그냥 덮어버리거나 질책만 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GE는 창업 이래 중요한 사고나 고장 등 실패정보를 기록하고 보물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자동차왕 헨리포드도 석유왕 록펠러도 실패와 아픔을 겪었다. 또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여 재기했다. 성공하는 조직은 실패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기록’과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미래를 향한 반성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부족한 게 기록하는 문화다. 까마귀처럼 잘 잊어 먹는다. 기억력이 부실하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도 시간만 흐르면 흐지브지다. 수많은 억울한 생명이 매몰된 삼풍백화점 터에 매머드 주상복합 아파트가 웬말인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실패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의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실패 친화도’가 높아야 한다. 민주적으로 ‘실패 파티’를 열고 ‘쓸개주’를 마시면서 구성원 모두 새롭게 다짐하는 것도 좋다.

그게 진짜 편 경영이다. 그래서 저절로 창조적 조직이 되는 게 미래를 열어가는 변화의 열쇠다.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시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Q 당사는 현재 수입부가세납부유예를 받고 있는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DDP조건은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수입부가세납부유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데, 그냥 수입부가세납부유예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수입부가세납부유예는 귀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유예하는 것인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은 귀사가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납부유예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자체를 신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건물임차료 내 주차료가 포함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Q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주차료 및 회의실 사용비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청구 받습니다.
주차 서비스는 당사 임직원과 손님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차서비스를 당사 임직원이 사용할 경우, 사용한 임직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Q. 1) 세금계산서는 1장만 작성되고, 적요도 통합하여 '0월 임차료'로 발행됩니다. 주차비 및 기타비용 포함하여 전액 임차료로 잡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주차비용만큼 직원 청구분을 비용에서 제하고, 매입공제도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아야할지?

회계 및 세무적으로 바른처리에 대해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직원이 비용부담하는 부분만큼은 비용에서도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에도 회사부담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세무회계처리 방법입니다.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신설 공사 시 타 업체와의 비용부담 관련

Q 당사와 타사가 구분하여 사용할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신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전체공사를 진행하고 일부는 당사에서, 나머지는 타 업체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타 업체가 사용하지만 당사가 대신 지어준 동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에 대해서만 자산처리하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당사가 자산처리할 금액은 당사가 공사한 금액에서 타 업체에게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A 귀사가 전체 컨테이너 공사를 완료후 일부를 타업체에 매각하는 거래라면 전체자산 등록후 매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애초부터 타업체와 귀사의 컨테이너의 귀속이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귀사가 단순대행업무만 이행하였다면 귀사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자산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가 협상중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당사(공급자)와 구매자간 판매단가 책정에 이견이 있어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공급이 완료된 월의 세금계산서를 우선 당사(공급자)가 책정한 공급가액으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공급이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우선 공급자가 책정한 세금계산서기준으로 공급자와 구매자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한후 추후 공급가액 재 확정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후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우선 귀사가 책정된 금액으로 발급후 이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다툼이 있다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자체를 안하고 추후 발급하면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되는 것이 원칙인데,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액화 배당가산을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게 된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율은 11%이다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 례]

금융 소득	이자소득	① 10,000,000원	기준금액
	배당소득 (상장)	② 10,000,000원(2천만원 채우는 금액까지는 배당가산 안함)	(20,000,000원)
		③ 10,000,000원(총액화 배당가산)	종합과세 (80,000,000원)
	배당소득 (비상장)	④ 20,000,000원(총액화 배당가산)	
사업소득 과세표준		⑤ 50,000,000원	

※ 종합소득공제금액은 0으로 가정함

(1)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때의 산출세액(종합과세 방식)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 방식)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begin{aligned} &= (2\text{천만원} \times 14\%) + [(2\text{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text{여타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 (20,000,000\text{원} \times 14\%) + [(30,000,000\text{원} + 30,000,000 \times 11\%) + (50,000,000\text{원})] \times \text{기본세율} \\ &= 2,800,000 + 14,700,000 = 17,500,000\text{원} \end{aligned}$$

㉡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text{금융소득} \times 14\%) + (\text{여타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 (50,000,000\text{원} \times 14\%) + (50,000,000\text{원} \times \text{기본세율}) \\ &= 7,000,000\text{원} + 6,780,000\text{원} = 13,780,000\text{원} \end{aligned}$$

따라서 종합과세방식(㉠)의 세액이 더 크므로 17,500,000원이 세액으로 결정된다.

(2) 배당세액공제는 다음 ㉠과 ㉡ 중 적은 금액인 3,300,000원을 적용

㉠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text{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times 11\% = 30,000,000\text{원} \times 11\% = 3,300,000\text{원}$$

㉡ 종합소득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방법의 산출세액

$$= 17,500,000\text{원} - 13,780,000\text{원} = 3,720,000\text{원}$$

(3) 납부세액

$$17,500,000\text{원}(\text{산출세액}) - 3,300,000\text{원}(\text{배당세액공제}) = 14,200,000\text{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 합산 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5 이상 10년 미만	20%	8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 이상 15년 미만	40%	
만 70세 이상	40%	15 이상	50%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및 세금

	퇴직금	운용수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세 (3.3~5.5%)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16.5%)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종교인의 소득구분에 따른 공제금액

구분	과세기준소득	공제구분	공제금액
기타 소득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비과세 제외)	필요경비	2000만원 이하 : 과세기준소득의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액의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액의 30%
			6000만원 초과 :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액의 20%
근로 소득	총급여 (비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과세기준소득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주요 투자상품 양도소득세 공제액

	2022년	2023년(예정)
국내주식	비과세	5000만
해외주식	250만	250만
암호화폐	비과세	250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10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

원망하지 말 것,
자책하지 말 것,
현실을 부정하지 말 것,
궁상떨지 말 것,
조급해하지 말 것.

해야 할 것 다섯가지는 무엇일까?

자신을 바로 알 것,
희망을 품을 것,
용기를 낼 것,
책을 읽을 것,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할 것.

이 열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다.

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훨씬 더 유용하다.

최 신 판 례 예 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5081, 2021.0721

Ⅰ 질 의

- '21.7월부터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미국달러선물을 독일 유렉스(EUREX) 연계 야간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예정임

질의내용

- EUREX 연계 야간시장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할 경우 국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상가건물의 분양 인도시기지연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Ⅰ 질 의

- 신청법인은 '20.7월 **도 **시 **구 소재 근린생활 시설(이하 "쟁점상가")을 수분양자들에게 '22.2월 까지 분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21.1월 쟁점상가 신축부지에 지반붕괴가 발생하여 공사지연 및 그에 따른 입주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분양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가액의 2%를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 '21.3월 입주지연에 따른 인도조건 변경으로 수분양자들과 분양가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지체상금")을 추가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변경된 인도기일('22.12월 예정) 등이 반영된 수정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질의요지

-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도시기 지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 지급 외에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서 지체상금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우
 -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Ⅰ 회 신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건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970, 2021.07.26

■ 질 의

- 상증령 § 54①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 94①4(다)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급배수시설, 야간조명시설, 옥외전기시설 등)이 소득세법 94①1, 2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건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355, 2021.09.17

■ 질 의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 회 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52, 2010.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852, 2010.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부세재산세 통합’ 지방 양극화 우려… 세금 완화는 필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이 자칫 지방재정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가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밖에 없으며,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는 지방마다 번 만큼 가져가지만, 중부세는 거두기는 부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지자체에서 덜 거두지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줘서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유세를 모두 재산세 형식으로 하면 열악한 지자체는 더욱 열악해지고, 부자 지자체는 더욱 부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자녀·손주 증여공제 1인당 5000만원… 공제금액 상향 움직임

자녀·손주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는 10년 내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추가 증여금액 규모별로 10~50%의 세율을 매기는데, 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

계비속 1인에 대해 증여해 준 돈에 대해서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성인 자녀·손주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 었다가 2014년 법이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기업활동 지원” 일한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유예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국세청, 2022. 5

I 개 요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해석사례, 계산사례 등 설명 자료를 포함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

- (현황)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됨
 - 관련 세법이 계속 개정됨에 따라 취업 연도별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감면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 증가
- (주요 내용)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을 반영
 -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감면소득 비율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사례 등을 보완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업무담당 직원이 감면신청 및 감면을 적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 및 개정사항 추가
-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II 제도 연혁

■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 12. 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 12. 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 12. 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 5. 29.	5년간 90%	청년(15~34세)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 1. 1.	-	장애인범위 확대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0. 1. 1.	대상업종 확대 · 창작, 예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 업 등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결혼, 자녀교육 사유 추가 · 퇴직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22. 1. 1.	-	경력단절여성 인정기간 요건 완화 · 퇴직후 2~15년 이내 동 종업종 취업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연혁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18.1.1.~'23.12.31.	90%	150만원
	'16.1.1.~'17.12.31.	70% ('18년 이후 90%)	150만원
	'14.1.1.~'15.12.31.	5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2.1.1.~'13.12.31.	10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60세 이상자 ·장애인	'16.1.1.~'23.12.31.	70%	150만원
	'14.1.1.~'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17.1.1.~'23.12.31.	70%	150만원



감면 요건

■ 감면 대상자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감면적용 배제

- 2011. 12. 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 1. 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력단절 여성 제외)
 -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기간: 매출액 등 규모 확대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 자산총액 5천억원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 (별표1)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IV

사후 관리

■ 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frac{\text{종합소득 산출세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 * '16년 이후 취업자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
○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산출세액}} \times \left[1 - \left(\frac{\text{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text{산출세액}} \right) \right]$$

V

계산사례

■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p>사례1</p>	<p>'22년도 8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p> <p>①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②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③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 ④ 산출세액 3,802,500원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p>
	<p>⇒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p> $3,802,500 \times \frac{20,000,000}{50,000,000} \times 90\% = 1,368,900$ <p>※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p> <p>⇒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422,400원</p> $660,000 \times \left(1 - \frac{1,368,900}{3,802,500} \right) = 422,400$ <p>※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산출세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 \right)$</p>



■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사례 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2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①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
	② 산출세액 3,802,500원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p>⇒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500,000원</p> $3,802,500 \times \frac{50,000,000}{50,000,000} \times 90\% = 3,422,250 \text{이나, 한도액 } 1,500,000 \text{원 적용}$ <p>※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p> <p>⇒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399,644원</p> $660,000 \times \left(1 - \frac{1,500,000}{3,802,500}\right) = 399,644$ <p>※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p>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원)

구 분	청년 감면	경력단절여성 감면	감면대상 아님
감면율	90%	70%	-
① 총급여	36,000,000	36,000,000	36,000,000
② 근로소득공제	10,650,000	10,650,000	10,650,000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25,350,000	25,350,000	25,350,000
④ 인적공제 ^{주1)}	3,000,000	3,000,000	3,000,000
⑤ 국민연금보험료 ^{주2)}	1,200,000	1,200,000	1,200,000
⑥ 건강보험료 ^{주2)}	1,000,000	1,000,000	1,000,000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20,150,000	20,150,000	20,150,000
⑧ 산출세액	1,942,500	1,942,500	1,942,500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 면세액	1,500,000	1,359,750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 ^{주3)}	163,104	214,800	716,000
⑪ 결정세액 (⑧-⑨-⑩)	279,396	367,950	1,226,500
⑫ 기납부세액 ^{주4)}	808,200 (80,820)	808,200 (242,460)	808,200
⑬ 차가감 납부할 세액	△528,804	△440,250	418,300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주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주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 감면세액/산출세액)

주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000천원 간이세액표 67,350원×12월 = 808,200 ()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90%, 7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기납부세액

VI 주요 해석

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 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특령 § 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검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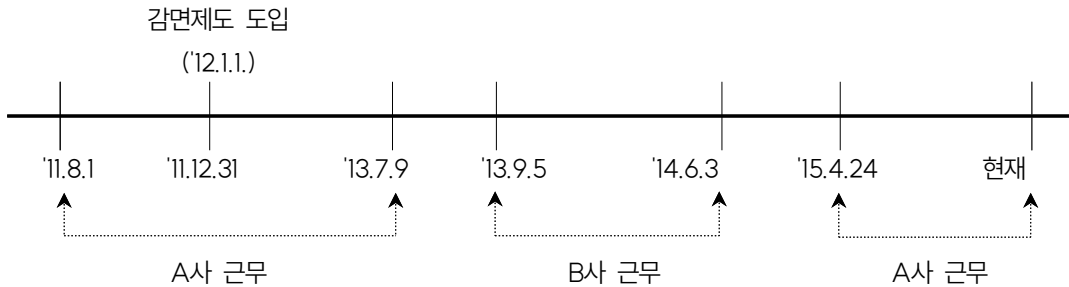
- 조특법 § 30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 § 2①2·3·4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외의 비영리기업도 포함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 30①에 따라 중기법 § 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 § 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 굳이 ()를 만들어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는 중기법 § 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하여도 해당 규정 2호~4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이기 때문임
 - 따라서, 중기법 § 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도 조특법 § 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법 § 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

3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 2011. 8. 1. A사에 취업하여 2013. 7. 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 9. 5.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함
 - B사에서 퇴사 후 2015. 4. 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여 근무



■ 관련법령

‘12.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도 ‘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조특법\$30①후단)

- ‘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30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30⑧)

■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검토내용

- 조특법 § 30⑧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특법 § 30⑧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특법 § 30⑧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사실관계로 봄이 타당할 것임
- 본 건 사례와 같이 A사를 퇴사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한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VII 질의 및 응답

감면 신청 일반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③ 연말정산)

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 8. 17.)

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
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9. 1. 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을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7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 ~ 2021년 6월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1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 1. 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일반

13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 12. 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5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 5. 31.)

1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16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

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18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0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인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 예) '13년 입사 후 이직, '18년 재입사 ⇒ '13년 또는 '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2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 4월 ~ 2020.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22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 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23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24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당시에는 만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 7. 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 '13. 7. 10. ~ '16. 7. 31. : 감면 요건 미충족 ('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 '16. 8. 1. ~ '17. 12. 31. : 감면 요건 미충족 ('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 '18. 1. 1. ~ '18. 7. 31. : 취업당시 연령 34세 이하로 감면 적용
(감면율 90% 적용, 150만 원 한도)

25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 90% (1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0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0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에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재소득-163, 2013.4.1.)

28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30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 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 8. 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3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32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33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 12. 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됩니다. 2011. 12. 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 1. 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 10. 25.)

34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2012. 1. 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2019. 5. 10.)
 -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35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 12. 12.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감면 대상 중소기업

3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7③)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유예기간: 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38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 기업에 해당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을 참고하여 영위 업종 검토

3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42, 2012. 10. 11.)



40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41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 1. 13.)

42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43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 2013. 9. 6.)

44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 12. 12.)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을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의무 안내

— 국세청, 2022. 5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원칙 : 직전연도(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begin{array}{c} \text{주업종 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end{array} + \begin{array}{c} \text{주업종 외 업종의} \\ \text{수입금액} \end{array} \times \left(\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right)$$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 § 201의11⑩)

◎ 추계신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 7/10,000 > 무신고가산세
-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text{산출세액} \times [\text{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0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21.07.2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육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 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4에 문의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작성요령

◎ 일반적인 작성요령

-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②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 ④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⑦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